

企劃論文

日本の 對韓‘賠償 비즈니스’를 둘러싼 韓日‘滿洲人脈’의 結合과 役割*

김 옹 기**

I. 서론	V. 결론
II. 한일 ‘만주인맥’ 형성과 결합과정	<참고문헌>
III. ‘배상 비즈니스’의 전개과정과 ‘만주인맥’의 역할	<국문요약>
IV. ‘배상 비즈니스’가 박정희 정부 내부에 미친 영향	

I. 서론

한일 국교수립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권력의 중심에는 공통적으로 만주경험자들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만주국군 장교 혹은 만주국 행정 관료로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박정희(朴正熙)와 최규하(崔圭夏), 두 전직 대통령들이 대표적인 인물이며, 일본의 경우는 만주국 산업계획을 운영했던 키시(岸信介), 시이나(椎名悦三郎)와 같은 고위직 관료를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군인, 기업가, 기술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만주경험자들이 이른바 ‘만주인맥’을 구성했으며, 해방 후 한국과 일본에서 공히 ‘권력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으며, 초고는 제4회 세계한국학대회(서울, 2008년 9월 21~23일)에서 발표되었다.

** 홍익대학교 전임강사, 정치학 전공(wkkim@hongik.ac.kr).

한일 국교수립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청구권자금에 관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청구권의 정의와 내역이 불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은 정식회담뿐만 아니라 비공식 교섭통로의 개척이 필요했으며, 이 때 각국의 정·관·재계 그리고 군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만주인맥’이 앞장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양국의 ‘만주인맥’은 만주에서는 세대 및 지위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 대면한 적도 없었으며, 심지어 일제치하에서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 있기도 했었다.

따라서 본고는 한일 양국의 ‘만주인맥’이 어떠한 경위로 양국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 과정 및 정상화 후에 실시된 청구권 관련사업(이하 ‘배상 비즈니스’)과 청합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며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만주인맥’과 ‘배상 비즈니스’ 사이의 연관성을 고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한일관계에 관한 연구는 그 시발점이 되었던 한일회담 과정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여기에는 미국이 자국의 아시아정책을 위해 한일 양국정부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한일회담의 조기타결을 촉구한 미국의 입장에 관한 연구도 포함된다.²⁾ 그리고 한일공식회담을 중심으로 한 연구 중 일부 한일회담을 둘러싼 비공식 교섭통로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있으며,³⁾ 한일 양국의 ‘만주인맥’과 ‘배상 비즈니스’를 개별적으로 다룬 연구도 있다. 그러나 한일의 ‘만주인맥’과 ‘배상 비즈니스’의 관련성을 논의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한일회담 협상과정 및 타결 후에 실시된 ‘배상 비즈니스’ 추진과정에서의 한일 ‘만주인맥’의 결합과정과 역할을 규명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 ‘배상 비즈니스’라는 단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III장 참조.

2) 한일회담을 주제로 다룬 연구로서는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Lee, Chong-Sik, *Japan and Korea: The Political Dimension*, California: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5; 高崎宗司, 『検証 日韓會談』(東京: 岩波新書, 1996); 太田修, 『日韓交渉』(東京: クレイン, 2003) 등이 있다. 미국의 입장에 관한 연구는 Bix, Hebert, “Regional Integration: Japan and South Korea in America’s Policy,” Frank Baldwin(ed.), *Without Parallel: The American-Korean Relationship since 1945*, New York: Random House, 1973; 李鍾元, 『東アジア冷戦と韓米日關係』(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96).

3) 박진희, 「韓日국교수립과정에서 ‘韓-日인맥’의 형성과 역할」, 역사문제연구소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년 10월 5일); 山本剛士, 「日韓關係と矢次一夫」, 日本國際政治學會(編), 『國際政治』, 第75號, (1983년 10월) 참조.

위의 연구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한국과 일본 두 개의 ‘만주인맥’의 형성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각국의 ‘만주인맥’이 한일회담과 ‘배상 비즈니스’ 관련 협상에서 어떻게 결합되었는가에 대한 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다음으로 ‘배상 비즈니스’의 특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두 가지 사례를 조명할 것이다. 끝으로 이들 사업이 박정희 정부에게 미친 영향에 관해 논할 것이다.

II. 한일 ‘만주인맥’ 형성과 결합과정

1. 한국의 ‘만주인맥’

한국의 ‘만주인맥’에는 크게 만주국군에 소속했던 군인 출신과 만주국 고등교육 기관 및 행정 관료 출신의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만주국군 출신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들 대부분이 만주사관학교⁴⁾로 총칭되는新京軍官學校(新京軍官學校) 그리고 그 전신인 봉천군관학교(奉天軍官學校)를 졸업하여 임관했다가 위관급으로 패전을 맞이한 경우이다. 이 중에는 원용덕(元容德)⁵⁾의 경우처럼 조선에서 의학공부를 마친 후에 군의관으로 만주국군에 특별 임용된 경우도 있었다.

만주국군 출신자들은 해방 후 한국국군 창군과정에도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심지어 그 다수가 1961년 5·16쿠데타에도 가담했다. 즉, 쿠데타의 중심이었던 박정희를 비롯하여 이주일(李周一),⁶⁾ 김동하(金東河), 윤태일(尹泰逸),⁷⁾ 박임항(朴任恒),⁸⁾ 방원철(方圓哲)⁹⁾ 등이 만주국군 출신이었다. 또한, 5·16직후 구성된

4) 만주국군의 사관학교로는 이 밖에도 육군군수학교(陸軍軍需學校), 육군군의학학교(陸軍軍醫學校), 육군비행학교(陸軍飛行學校), 육군수의학교(陸軍獸醫學校), 몽고인 장교 양성을 목적으로 한 흥안군관학교(興安軍官學校) 등이 있었다.

5) 원용덕은 신경군관학교 교의(校醫)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박정희가 좌익활동 의혹으로 인해 군 사계관을 받았을 당시 백선엽(白善燁, 봉천 9기)과 함께 구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만주국군 관계자들 중 최연장자(1908년생)였으며, 이승만 정부 시절에 부산정치파동에 개입하는 등 정치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신주백, 『滿洲國軍 속의 조선인 군인들』, 역사문제연구소 학술대회 발표 논문(2002년 10월 5일), 34, 36, 48쪽; 정우현, 『실록 군인 박정희』(개마고원, 2004), 155쪽.

6) 신경 2기, 육군 소장, 감사원장 역임.

7) 신경 1기, 서울특별시시장, 국회의원 역임.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 명단에는 최주중(崔周鐘),¹⁰⁾ 그리고 김윤근(金潤根)¹¹⁾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때는 육군참모총장에 정일권(丁一權),¹²⁾ 1군 사령관에 백선엽(白善燁), 2군 사령관에 강문봉(姜文奉)¹³⁾ 등 군부 주요 요직이 만주군 출신자들로 동시에 채워진 적도 있었다. 만주국군 사관학교의 제도상, 성적우수자가 일본육군사관학교에 편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 장교 후보생들과의 인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했다. 후술하듯이 이러한 인맥이 후에 한일회담 및 ‘배상 비즈니스’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한편, 또 다른 ‘만주인맥’의 주류는 고급교육기관 및 행정관료 출신자들이었다. 즉 건국대학(建國大學),¹⁴⁾ 신경법정대학(新京法政大學)과 같은 만주국 고등교육기관 출신자 그리고 만주 및 일본 대학 출신자들 중, 만주국 고시합격자를 대상으로 고급관료 양성과정을 교육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동학원(大同學院)¹⁵⁾ 출신자들이 이에 포함된다. 해방 후 이들 대부분이 군인, 관료, 외교관, 대학교수와 같은 테크노크라트로서 일했다. 대동학원의 조선인 졸업생은 85명이었으며, 최규하(崔圭夏)¹⁶⁾를 비롯해 박정희 정부 당시 한일관계에서 활약한 인물로는 권일(權逸),¹⁷⁾

8) 신경 1기, 육군 준장, 건설부장관 역임.

9) 신경 1기, 치안국 정보과장 역임.

10) 신경 3기, 육군 준장, 주택공사 사장 역임.

11) 신경 6기, 해병 중장 예편.

12) 봉천 5기, 총리 등 역임. 정일권은 조선인으로는 유일하게 육군고등군사학교(陸軍高等軍事學校) 일제의 육군대학교에 해당에서 만주국군 고급간부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신주백, 앞의 논문.

13) 신경 5기.

14) 건국대학은 1938년 5월에 개학한 만주국의 최고학부이었으며, 관동군 참모부장(關東軍參謀副長) 이시하라(石原莞爾)의 ‘아시아대학’ 구상을 실현시킨 것이다. 건립과정에 관동군이 관여했으며, 정치·경제·문교학과로 구성된 본과, 예과 그리고 연구원이 설치되었다. 민족(일본, 만주(중국), 조선, 몽고, 러시아)의 구분 없이 전원 기숙사 생활을 의무화했던 것이 특징이며, 조선인 졸업생은 총리를 역임했던 강영훈(姜英勳)이나 국군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민기식(閔機植) 등 17명이 확인된다. 윤휘탁, 『신경의 조선인: 이산과 정착 사이』, 김경일(외),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역사비평사, 2004).

15) 대동학원(大同學院)은 1931년의 9·18사변(만주사변) 후, 봉천자치지도부가 세운 자치훈련소로 시작했으며, 1932년 봉천자치지도부가 폐지된 후, 신경으로 이전되어 자정군 훈련소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자정국이 폐지된 후에 국무원 총무청으로 이관됨으로써 대동학원으로 개칭되었다. 만주국 고급관료 양성을 목적으로 했으며, 교육기간은 6개월(일부는 1년)이었다.

16) 대동학원 15기. 외무부 장관, 총리, 대통령 등 역임. 최규하는 대동학원을 졸업했으나 만주국 관

안광호(安光鎬)¹⁸⁾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만주인맥’의 특징은 박정희 일인에게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5·16쿠데타 당시 박정희를 도왔던 이들조차도 여러 번에 걸친 숙청으로 인해 정일권의 경우처럼 그에게 종속되거나 아예 권력 밖으로 밀려 나기도 했다.¹⁹⁾ 그러나 한국의 ‘만주인맥’들은 그 주변에서 각기 정·관·재계에서 고위직을 차지했으며, 그 중 일부는 종속적인 입장으로나마 한일관계 그리고 박정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건설 사업에 참여했던 것이다.

2. 일본의 ‘만주인맥’

피뢰국가 만주국의 지배자였던 일본은 만주국 국가건설의 모든 과정에 개입했다. 그러므로 만주경험자의 숫자는 한국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전후 일본 ‘만주인맥’은 키시,²⁰⁾ 시이나²¹⁾를 비롯한

료로 일한 경력은 없다. 이에 대해 최규하 측은 만주국 관료로 임명될 수 있는 특권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창욱 교수는 “최규하가 대동학원 졸업 후 귀국해 조선총독부의 촉탁이 됐다는 얘기를 최초 친척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일제피뢰 만주국서 끈끈한 “군맥” 다져, 《세계일보》, 2006년 8월 6일.

- 17) 대동학원 10기. 권일은 명치대학(明治大學)을 졸업한 후, 일본 고등문관고시(高等文官考試)에 합격한 뒤, 대동학원을 거쳐 만주국에서 판사가 되었다. 해방 후, 일본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제일거류민단 단장, 주일한국대표부 법률고문, 한국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한일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했다. 김민철, 「만주국의 판료를 꿈꾸는 조선인 대동학원 출신자들」, 『민족문제연구』, 12호(1996), 43쪽; 權逸, 『玄海灘을 사이에 두고: 日本 속의 南과 北』(해외교포문제연구소출판부, 1983).
- 18) 대동학원 16기. 안광호는 주일공사, 한국무역진흥공사 사장 등 역임했으며, 해방 후 한국군에 입대하여 육군총장 비서실장을 맡은 경력도 가지고 있다(육군 준장 예편). 그의 부친 안병범은 일본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서 6·25직후에 전사했다. 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3)』(조선일보, 1998) 11장 참조. 한편, 안광호는 주일공사 시절의 보직은 교민업무이었으나, 한일기본조약 체결과 동시에 청구권자금 운영의 일본 현지 창구로서 개설된 경제사절단(당장 민총식) 업무를 지원하기도 했다.
- 19) 그 대표적 사건으로 1963년에 일어난 반혁명사건(反革命事件, 이른바 ‘알래스카 토벌’)을 들 수 있다. 이는 김종필의 대두에 반감을 가진 만주국군 출신자(김동하, 박입항 등 21명)들을 쿠데타 음모 혐의로 모조리 체포한 사건이며, 이들을 권력에서 배제함으로써 박정희의 일인독재체제가 굳혀졌다.
- 20) 통제경제적 성향을 띤 산업합리화운동(産業合理化運動)을 상공성(商工省)에서 주도했던 키시는

이른바 ‘혁신관료(革新官僚)’ 출신들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다. 이들은 1920년대에서 30년대 초반에 일본 상공부 관료로 일했을 당시 통제주의적 산업계획운동을 시도했다가 자유방임을 선호하는 정·재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좌절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만주에서는 관동군(關東軍)의 전폭적 비호를 받으며, 아무런 저항세력 없이 군수산업 확립, 식량증산, 중요산업 지정과 같은 계획경제적 노하우로 국가가 산업전반을 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개발5개년계획(産業開發五個年計劃)을 1937년부터 실시할 수 있었다. 만주에서의 이러한 경험을 갖게 된 만주과전 관료들은 1930년대 중반부터 일본으로 귀임하기 시작했으며, 1940년대에 들어서 일본의 전시경제를 주도하게 되었다. 그것은 곧 만주의 증공업화와 더불어 원료공급원과 시장 확대를 위해 국제시장, 특히 아시아시장에 적극 진출한다는 것이었다.²²⁾

일본의 패전 직후에 만주지배와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인사들 가운데 키시는 극동군사법정(極東軍事法廷)의 기소를 면했던 가장 거물급에 속한다. 키시는 공직

상공대신 코바야시(小林一三)와의 갈등과 관동군의 요청으로 1936년 10월에 만주국 산업계획을 주관한 국무원 실무부 총무사장(國務院實業部總務司長)으로 만주에 파견되었다. 1937년 7월에 산업부 차장(産業部次長), 1939년 3월에는 총무청 차장(總務庁次長)에 취임했으며, 이 시기에 통제경제와 계획경제적 수법을 도입한 산업개발5개년계획(産業開發五個年計劃)을 주도했다. 또한, 일본 귀국 후, 상공대신(商工大臣), 군수성 차관(軍需省次官)으로 전시경제를 주도했다. 전후 A급전범 혐의로 체포, 공직추방을 겪었으나 1951년에 공직추방이 해지된 후, 1955년 자유민주당(自由民主黨) 창당을 주도, 1957년 수이시바시(石橋湛山) 수상의 사당으로 수상 자리에 올랐다. 키시의 만주시절의 행적에 관해서는 Johnson, Chalmers,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참조.

- 21) 시이나는 상공성 시절부터 계속해서 키시의 오른팔이었던 인물이다. 키시의 만주과전에 앞서 만주에 파견되어 통제과장(統制科長), 산업부 광공사장(産業部鑛工司長)을 맡았으며, 일본 귀국 후, 상공성 산업합리국장(商工省産業合理化局長) 그리고 군수성 육군사정장관 겸 총동원국장(軍需省陸軍司政長官兼總動員局長)으로 일본 전시경제 실무를 진두지휘했다. 전후 키시 내각에서 관방장관(官房長官), 이케다 내각에서 외무대신(外務大臣)을 맡았으며, 1965년 2월 일본 각료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하여 과거 식민지배에 관한 일본의 과오를 인정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한일간의 협상을 크게 진전시키기도 했다. 시이나의 행적에 관해서는 椎名悦三郎追悼録刊行會(編), 『記録 椎名悦三郎 下巻』(東京: 椎名悦三郎追悼録刊行會, 1982) 참조.
- 22) 山本有造, 『「滿洲國」經濟史研究』(東京: 名古屋大學出版會, 2003); 淺田喬二·小林英夫(編), 『日本帝國主義の滿洲支配』(東京: 時潮社, 1986) 참조. 또한, 코바야시(小林英夫)에 의하면 전후 일본의 대아시아 전쟁배상은 이와 같은 구상을 실현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小林英夫, 『滿洲と自民黨』(東京: 新潮社, 2005).

추방이 풀린 직후인 1952년 4월에 다시 정계에 복귀함으로써 군부세력이 제거된 ‘민주인맥’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시이나를 비롯한 상공성 출신 후배들, 그리고 상공성의 후신인 통상산업성(通商産業省)과 함께 1950~60년대 국가주도형 고도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또한 이들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국교정상화와 이에 따른 배상 혹은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왜냐하면 아시아시장 진출은 곧 일본의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일본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배상교섭은 한일회담의 경우로도 알 수 있듯이 난항을 거듭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로 인해 비공식채널을 통한 교섭이 수시로 활용되었으며, 일본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 이른바 ‘흑막(黑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이 등장했다. 한일관계에서는 코다마(兒玉譽士男²³)와 야츠기(矢次一夫²⁴)와 같은 만주와 인연이 깊은 인물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서로 다른 정치세력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했으나 공통적으로 키시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민주인맥’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흑막’은 종합상사나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일본 대기업들과 공생관계가 있었다. 일본 대기업들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국교수립 후에 일어날 사업 기회, 즉 ‘배상 비즈니스’의 기회를 얻기 위해 일본 정계와의 관계를 맺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대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역무배상’ 방식으로 실시되는

‘배상비즈니스’는 일본정부가 지불보장을 한다는 점에서 안전하게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문호가 닫히게 된 아시아 시장에 일본기업이 재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일본 기업들은 각국 교섭 당사자들과의 인맥과 그와 관련된 재빠른 정보를 얻기 위해 ‘흑막’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이다.

3. 한일 ‘민주인맥’의 결합 과정

1) 이승만 정부 시절

1951년 제1차 회담이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한일의 ‘민주인맥’들은 양쪽 모두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민주경험자들은 아직 2, 30대의 젊은 세대이었으며, 일본 측에서는 키시를 비롯한 ‘민주인맥’ 중 상당수가 공직추방 처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주경험자들이 한일협상 당사자인 보수진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한일 양측 대표단의 협상 타결의 지가 희박했던 점도 있었으므로 가교역할의 인사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이승만 정부 당시 대일협상을 위한 물밑작업은 주일한국대표부의 유태하(柳泰夏²⁵)가 맡고 있었으며, 1961년 5·16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부가 그의 성과를 물려받게 된다. 당초 유태하는 키시의 만주시절부터의 동맹자인 야츠기(矢次一夫)를 통해 구축한 인맥을 동원해 자민당 관료파(官僚派) 의원들을 주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였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²⁶ 그런데 수시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회담에 드디어

23) 코다마는 A급 전범으로 스가모 구치소(巢鴨拘留所)에서 복역했을 당시 함께 수감되어 있던 키시를 알게 되었다. 코다마는 서울 선린상고(善隣商高)를 다니다가 일본으로 귀국 후, 행동과 우익으로서 몇 차례의 수감생활을 경험한 후, 1932년 만주로 건너가 군부와의 인맥을 얻게 되었다. 1941년 상해에 해군항공본부 촉탁 신분으로 이른바 ‘코다마기관(兒玉機關)’이라는 정보기관 겸 상점을 냈으며, 군수물자 납입을 주업무로 했는데, 코다마는 다이아몬드나 플래티늄 거래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마련했다. 이 자금이 패전 직후의 혼란 속에서 그의 개인재산으로 둔갑하여 그 후의 활동자금이 된 것이다. 코다마의 이력과 인맥에 관해서는 竹森久朝, 『見えざる政府: 兒玉譽士男とその黒の人脈』(東京: 白石書店, 1976) 참조.

24) 야츠기는 만주국에서 조선인 통제 및 동원조직인 협화회(協和會)와 관련이 깊었던 인물이다. 그가 키시를 알게 된 것은 키시의 상공성 국장 시절이었으며, 키시가 만주에서 귀국한 1939년에 상공성 사무차관이 되면서 급속도로 친해지기 시작했다. 전후 국책연구회(國策研究會)라는 우익 단체를 운영했던 그는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물밑교섭에 깊이 관여했으며, 키시의 수상 시절인 1958년 5월 키시는 야츠기를 이승만에게 개인특사로 파견한 적도 있었다. 야츠기의 행적에 관해서는 矢次一夫, 『わが浪人外交を語る』(東京: 東洋經濟新報, 1973); 山本剛士, 앞의 논문 참조.

25) 유태하(柳泰夏)는 이승만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의 총애를 받음을 통해 이승만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주일대표부 참사관, 공사 등을 역임하는 등, 1960년 4·19사태로 이승만이 하야할 때까지 줄곧 일본과의 외교 창구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일본에 밀입국한 재일한국인을 상대로 일본비자 발급을 빌미로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각종 부정축제와 연루되었음으로 인해 재일한국거류민단을 중심으로 한 재일한국인들에 의해 추방운동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의 외숙인 장택상(張澤相)은 그가 외교관이 된 것에 대해 ‘그야말로 한국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고까지 공언했다고 하며, 재일거류민단 단장을 지낸 권일(權逸)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기(유태하)네의 비위사실이 알려질까 봐 비서실에게 (민단단장인 자신의) 대통령면담을 시키지 말도록 사전공작을 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유태하의 행적에 관해서는 姜鸞郷, 『駐日代表部』(東亞PR研究所出版部, 1966), 282~319頁, 權逸, 앞의 책, 150쪽 참조.

26) 야츠기는 자신의 저서에서 방위청 항공막료장(防衛廳航空幕僚長) 우에무라(上村健太郎)를 통해 유태하를 알게 되었고 야츠기가 키시에게 유태하를 소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矢次一夫, 앞의 책, 55頁.

한일의 ‘만주인맥’이 등장할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시바시(石橋湛山) 내각의 외무 대신 겸 부수상이었던 키시가 이시바시의 병으로 인해 1957년 초에 내각을 인수 받았기 때문이다. 키시는 외무대신을 겸직하면서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유태하의 로비활동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 유태하와 키시의 만남은 ‘키시 수상 겸 외무대신에게 내가 유씨를 빈번히 데려갔다’고 야츠기가 회고할 정도로 빈번해진 것이다.²⁷⁾

키시가 유태하와의 협상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완강한 이승만을 설득하기 위해 야츠기를 자신의 개인특사 자격으로 한국에 보내기 위한 공작을 유태하에게 의뢰했기 때문이다.²⁸⁾ 이리하여 1958년 야츠기의 한국 방문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승만과 키시 사이에 서신 교환이 성사되었으며,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일회담이 재개된 것이다. 그러나 제일조선인 복송 문제로 인해 양국관계가 다시 험악해진다. 4·19사태로 인한 이승만의 하야, 그리고 미일안보조약 갱신을 둘러싼 키시에 대한 여론 악화와 수상직 사임으로 인해 교섭자체가 중단되고 말았다.

2) 박정희 정부 시절

박정희는 1961년 5·16쿠데타로 권력을 잡자마자 한일회담 조기타결을 위해 유태하가 벌여왔던 로비활동의 성과를 승계하려고 했다.²⁹⁾ 당시 유태하는 박정희 정부에 의한 소환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가 야기시킨 부정축재문제를 추궁 받을 것을 두려워해 마치이(町井久之)³⁰⁾에게 의지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다.³¹⁾ 그러나 박

27) 야츠기에 대한 인터뷰, 山本剛士, 앞의 논문, 117項

28) 야츠기에 대한 인터뷰, 위의 논문.

29) 5·16쿠데타 직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박정희에 대해 의심을 품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에 대한 조사의 총책임자이던 오오하라(大平正芳) 관방장관이 박정희의 신경군관학교 시절의 일본인 동기생이자 당시 방위청 중앙자료대(防衛廳中央資料隊) 중국반장 오시이(押井和久)에게 박정희에 관한 문답을 통해 사상적 배경을 알아보는 등, 여러 채널을 통한 조사 끝에 박정희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韓日間 幕後 인물 朴哲彦의 八旬 追記」, 《월간조선》, 2004년 7월호.

30) 마치이의 본명은 정건영(鄭建永)이며, 폭력단 토세이카이(東聲會) 회장이자 코다마의 의형제이었던 재일한국인이다. 자신이 돌보고 있던 유태하 귀국공작에 대한 협조나 코다마와 김종필, 박정희 정부의 관계를 추선하는 등의 공을 인정받아 ‘재일한국인 중 유일하게 단독으로 박정희를 만날 수 있는 자로 알려졌다고 한다. 그는 부관철회 사업에 관여함으로써 한국과의 이권에도 개입했다. 중앙일보 실록 박정희시대 특별취재팀, 『실록 박정희』(중앙M&B, 1998), 222쪽.

정희 정부는 유태하의 로비성과를 승계하고자 그의 귀국공작을 전개하여 귀국시켰다. 박정희 정부는 유태하가 귀국 후 제출한 리스트를 통해 그간의 한일회담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³²⁾ 유태하의 성과는 최영택을 거쳐 김동조(金東祚)³³⁾에게 인계되어 김동조가 주일공사 겸 제7차 회담 당시 한국측 수석대표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1960년에 키시가 수상자리에서 물러난 후, 그와 갈등관계에 있던 이케다(池田隼人)가 수상에 취임한 상태이었던 때문에 더 이상 유태하의 로비성과를 활용할 수 없었고 새로운 교섭 통로의 개척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케다와 통하기 위해서는 유태하가 야츠기를 통해 관계를 구축해 온 자민당 관료파(官僚派)가 아니라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당인파(黨人派),³⁴⁾ 그

31) 당시 일본정부가 유태하의 일본 체류를 묵인하고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그의 이용가치에 대해 일본 측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일본 체류에 관해 당시 법무성 입국관리국장(法務省入國管理局長)은 국회에서 “한국으로 강제적으로 송환했을 경우에는 생명이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유태하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므로 유태하를 본방(일본)에 정식으로 재류시킬 수는 없으나 그 국외퇴거라는 결정이 내려진 채 본방에 인신적으로 존제하게 해둔다는 것이 유태하에 대한 처우”라고 국회에서 설명한 바 있다. 第38回參議院法務委員會, 第16號, 1961年 5月 23日.

32) 유태하의 이용가치를 박정희 정부에게 알린 것은 문경보통학교 시절의 제자이자 재일한국학생동맹 위원장였던 전세호(錢世鎬)이다. 여권도 없이 한국에 입국하려다가 체포된 전세호는 김종필의 오른팔이던 최영택(崔英澤) 중앙정보부 제5국장의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그 동안의 유태하의 로비활동에 대하여 진술했다. 보고를 받은 김종필은 최영택과 전세호를 일본으로 보내어 유태하 귀국공작에 나섰다. 또한 최영택은 유태하의 귀국공작에 대한 협조를 한국거류민단 단장 권일(權逸)에게 요청했는데, 당시 5·16쿠데타 및 박정희 정부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접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일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에 대한 권일의 박정희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즉 부패를 멀리하고 경제부흥을 지향하며 한일회담 타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느꼈기 때문이다. 만주에서 판사로 일하여 전후 일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었던 권일을 통해서도 키시와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등, 재일한국인들이 교섭통로도 활용된 것이다. 최영택(崔英澤)에 대한 인터뷰, 共同通信社(編), 『沈黙のファイル』(東京: 共同通信社, 1996), 참조; 權逸, 앞의 책, 183~186쪽.

33) 김동조는 1943년 일본 큐슈대학(九州大學) 법문학부 재학시절에 일본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한 뒤 일본 후생성(厚生省)과 내무성(內務省)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김동조, 『회상 30년 한일회담』(중앙일보, 1986); 박진희, 앞의 논문, 117쪽.

34) 자민당 정치가는 크게 관료파(官僚派)와 당인파(黨人派)로 나눌 수 있다. 당인이라 단어는 자민당에서 정당활동을 통해 지방의원을 거쳐 국회의원 자리까지 올라온 의원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또한, 실업가, 재산가와 같이 독자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대표적인 인

중에서도 이케다 내각 당시 자민당 부총재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오오노(大野伴睦)와의 교섭통로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³⁵⁾ 이로 인해 유태하 귀국공작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여 당시 주일대표부로 파견되어 있던 최영택(崔英澤)³⁶⁾이 새로이 개척한 통로가 일제치하 조선에서 7년 동안 거주한 경력이 있는 우익의 거물 코다마(児玉譽士夫)이었던 것이다.³⁷⁾

코다마는 일본해군 측탁 신분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했던 시절에 벌어들인 재산을 밑천으로 공직추방에서 풀려난 하토야마(鳩山一郎)를 비롯한 비관료출신 정치가들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통해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코다마는 A급전범 용의로 스가모 구치소(巢鴨拘置所)에서 함께 복역했던 인연으로 키시와도 관계를 맺는 등 관료파 정치가와의 관계도 두터웠다. 한국측 입장에서 볼 때 코다마와의 관계를 확보함으로써 그동안 소홀했던 자민당 당인파에 대한 통로를 새로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야츠기를 통해 구축해온 관료파에 대한 또 다른 교섭통로를 마련하게 된 셈이다. 무엇보다도 이케다 정권 하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었던 오오노를 공략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오노의 한국에 대한 반감³⁸⁾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³⁹⁾ 코다마를 통해 오오노를 만난 최영택은 김종필과의 만남을 주선했으며 그 후 김종필이 박정

희 정부의 통로가 되었다. 만주와 일본의 사관학교 출신인 박정희를 비롯한 군인들이 정권을 쟁취했다는 소식은 오오노를 비롯한 일본 정치가들을 하여금 신뢰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으며, 그 신뢰란 김종필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자민당 8개 파벌의 장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을 정도이었다.⁴⁰⁾

이와 같은 관계개선을 바탕으로 정식협상이 진정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케다 내각, 그리고 조약 체결시의 내각인 사토(佐藤榮作) 내각에서 외무대신을 맡은 시이나가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시이나는 1965년 2월 일본 각료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해 과거 식민지배에 관한 일본의 과오를 인정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교 정상화 교섭을 마무리 짓게 하는 역할을 했다.⁴¹⁾

종합상사를 비롯한 일본 대기업들은 이 시기를 전후하여 박정희 정부 내부 인사들에 대한 로비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국 간의 협상 타결 후 부수적으로 발생한 ‘배상 비즈니스’에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같은 행보는 이미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서 전개된 ‘배상 비즈니스’에서 일어난 패턴을 상당부분 답습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박정희와 키시를 정점으로 하여 결합된 한일 양국의 ‘민주인맥’이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민주인맥’이 ‘배상 비즈니스’의 전개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III. ‘배상 비즈니스’의 전개과정과 ‘민주인맥’의 역할

1965년 한일조약 체결로 결정된 청구권자금(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 이상)은 대부분 박정희 정부의 경제부흥을 위한 기반시설에 투입되었다. 그런데 청구권자금의 규모는 곧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배상 비즈니스’를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규모를 의미했다. 그 이유는 아시아 국가들에

물로는 하토야마(鳩山一郎), 미키(三木武吉), 코노(河野一郎), 오오노(大野伴睦) 등을 들 수 있다.

35) 山本剛士, 앞의 논문, 117쪽.

36) 최영택은 육사 8기 출신으로 1963년 대령으로 예편한 후, 최영택 중앙정보부 제5국장으로 김종필과 함께 대일교섭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다가 주일대표부 참사관, 공사, 국무총리 외교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박진희, 앞의 논문, 116쪽.

37) 최영택은 코다마와 1961년 말, 오오노는 1962년 초에 처음으로 만났다고 한다. 최영택에 대한 인터뷰, 共同通信社(編), 앞의 책. 한편, 한국정부가 공개한 한일회담관련문서에서도 최영택의 코다마에 대한 접촉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예로 이른바 ‘김종필—오오노 메모’가 밝혀지기 전인 1962년 3월 13일자 접촉에서 코다마는 최영택에게 ‘정보소식통’의 이야기로서 ‘일본 측이 청구권 1억 달러와 무상원조 2억 달러, 합계 3억 달러를 제시할 것’이며 ‘한국 측의 요구금액을 6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었던 점과 ‘최종적으로 일본 측이 5억 달러로 결론지를 방할’임을 밝혔던 것이 기록에 남아있다. 이 기록을 통해 코다마와 일본 정계 사이의 관계 깊이를 알 수 있다. 「大物右翼・故児玉譽士夫氏カ暗躍」 日韓交渉文書公開, 《朝日新聞》, 2005년 8월 27일.

38) 오오노는 제일한국인 학생으로부터 폭력행위를 당한 적이 있어 한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五十嵐仁, 『戦後政治の美情』(東京: 小学館, 2003), 75頁.

39) 오오노는 이후 한일회담 타결의 적극론자로 변화되었으며, 이른바 ‘김종필—오오노 메모’에 이케다 수상이 난색을 표했을 때도 이케다를 설득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의 책.

40) 최영택에 대한 인터뷰, 위의 책. 코다마와 김종필이 각별히 친했던 데에는 김종필이 박정희와의 대립으로 인해 불운을 겪고 있었던 시절에 코다마가 돌봐 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毎日新聞社政治部(編), 『黒幕 児玉譽士夫』(東京: エール出版社, 1976), 84頁.

41) 이 발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관해서는 椎名悦三郎追悼録刊行會(編), 앞의 책, 47-51頁 참조.

대한 일본의 배상이 갖는 공통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것은 미국의 압력으로 일본의 배상액 자체가 축소되었다는 점과 이와 같은 미국의 의지가 반영되어 도입된 것이 역무배상(役務賠償)⁴²⁾이라는 방식이라는 점이었다. 따라서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미국은 아시아에 있어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일본 경제 부흥을 위해 배상 부담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므로 자신의 대일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함과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여타의 아시아 국가들에게 일본과의 조기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배상액 규모를 최소화시키려는 압력을 가했던 것이다.

한편, ‘역무배상’의 방식은 일본의 대아시아 배상 전개과정에서 ‘배상 비즈니스’라는 형태를 부수적으로 수반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배상 비즈니스’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되었다. 첫째, 일본으로부터 역무배상 형태로 받아 추진되었던 피해국의 각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권을 오로지 일본 기업이 독점하게 했다는 점, 둘째, 각 프로젝트에 대한 일본정부의 결제가 피해국가가 아닌 일본 기업에게 직접 행해졌다는 점, 셋째, 피해국에서 실시된 프로젝트들 대부분이 댐이나 발전소와 같은 인프라 건설 사업에 치중됨으로써 대규모화 되었다는 점, 넷째, 입찰방식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이 진행되어 납품가격의 비대화는 물론 불투명한 자금 사용의 여지가 발생되었다는 점 등이다. 그 결과 피해국에 대한 피해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본의 배상은 ‘역무배상’ 및 ‘배상 비즈니스’라는 전개과정으로 인해 일본 자국의 이익만을 최대화시킨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일본 기업들에게 아시아시장에 대한 재진출 기회까지 마련해준 셈이 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의 대아시아 배상 및 청구권의 규모는 곧 일본 기업들의 수익규모’라는 공식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특성을 가진 일본의 ‘배상 비즈니스’에는 막대한 이권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둘러싸고 일본의 정·재계 인사들이 앞 다투어 외교협상에 개

42) 역무배상이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도입된 배상방식이며, 일본에 대해서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14조 1항 등으로 규정되었다. 미국은 일본에게 금전이 수단이었던 전쟁배상의 관례와는 달리, 자신에 대한 대일청구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피해국들에게도 일본의 생산물과 역무(서비스)로 배상을 받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는 냉전체제로 인해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짐으로 인해 미국이 일본경제의 부흥을 도모하기 위한 배려에 의한 것이다. 이에 의해 일본은 배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입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진출기회를 얻고자 했던 일본 기업들까지 일본 및 여러 아시아 국가의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경쟁적인 로비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막대한 이권을 둘러싸고 공식 대화통로는 물론 비공식 교섭 통로의 개척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상 비즈니스의 패턴은 이미 버마(현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남베트남 등지에서 전개되었으며, 아시아 국가들 중 마지막으로 일본의 배상 비즈니스가 전개되었던 한국에서도 상당부분 그대로 답습되었다.

한국에서도 국가 간의 정식 혹은 비공식적 교섭자였던 키시를 위시한 정치가들은 물론 사업기회를 얻고자 하는 일본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로 인해 ‘배상 비즈니스’의 중심에는 키시와 박정희라는 양국의 정상은 물론 한국의 경제 기반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나 기술 그리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여타의 만주경험자들 이르기까지 한일 ‘만주인맥’의 교류가 있었다. 이에 다음으로 ‘배상 비즈니스’를 통해 한일의 ‘만주인맥’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었는가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고찰을 위해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일본 종합상사인 이토츄상사(伊藤忠商事)가 한국의 ‘배상 비즈니스’를 개척한 사례이며, 두 번째 사례는 개발컨설팅 기업인 일본공영(日本工營)의 예이다.

1. 이토츄상사(伊藤忠商事)

일본 종합상사들 중에서도 이토츄상사의 사례는 對아시아 ‘배상 비즈니스’ 참여 과정에서 ‘만주인맥’의 역할이 뚜렷이 드러난 경우라 할 수 있다.⁴³⁾ 일본의 對아시아 ‘배상 비즈니스’의 중심에는 종합상사들의 존재가 있었다. 종합상사의 생명선은 시장정보 수집능력에 있었으며, 이는 곧 한일 양국의 영향력이 있는 ‘실세’의 포섭을 의미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정희 정부가 이케다 내각 성립으로 인해 새로운 교섭통로 개척을 위해 최영택이 코다마를 접촉한지 얼마 되지 않아 코다마로부터 이토츄상사의 세지마(瀬島龍三)⁴⁴⁾를 소개받은 것도 바로 그런 ‘실세’

43) 일본 종합상사에 의한 한국 진출과정에 관한 연구는 박진희, 앞의 논문 참조.

44) 세지마는 일본 육군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만주에서 관동군 참모를 거쳐 대본영 육군부 작전과(大本營陸軍部作戰課)에서 태평양전쟁의 거의 모든 작전 입안에 관여한 일본군인 중 최고

포섭의 일환이었다.⁴⁵⁾ 이는 이토츠타사의 창구가 코다마였던 점과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위한 물밑 작업 단계에서 벌써 ‘배상비즈니스’를 둘러싼 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이토츠타사와 코다마의 행보는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배상 비즈니스’의 경험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토츠타사가 인도네시아 ‘배상 비즈니스’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은 정보수집을 총괄하는 업무부를 지휘했던 세지마의 츠지(辻政信)⁴⁶⁾와의 인맥 덕분이었다. 관동군과 대본영 시절 세지마의 선배참모이자 전후에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츠지는 세지마에게 당시 인도네시아 수상 스텐카르노와 돈독한 사이였던 쿠보(久保正雄)를 소개했다. 쿠보는 오퍼상 규모의 ‘동일무역(東日貿易)’이라는 상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토츠타사는 이런 동일무역을 매개로 인도네시아 ‘배상 비즈니스’를 개척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토츠타사는 일본 국내에서도 건설 당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코다마를 이용하여 당시 건설대신(建設大臣)이었던 당인과 정치가 코노를 설득하기 위한 공작을 펼치기도 했다.⁴⁷⁾

이토츠타사는 위와 같은 인도네시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배상 비즈니스’ 관련 사업을 수주하고자 했다. 한국과의 ‘배상 비즈니스’에 있어 이토츠타사의 창구가 된 것은 코다마였다. 1962년 협상 재개를 위해 자민당 부총재였던 오노노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세지마는 코다마의 주선으로 김종필 자택을 방문했다.⁴⁸⁾ 다른 일본기업들이 한국의 ‘배상 비즈니스’ 관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의 ‘실세’였던 김종필과의 관계를 구축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츠타사가 타사에 앞서 ‘만주인맥’을 앞세워 김종필과의 통로

엘리트였다. 패전직전에 관동군에 파견되어 소련군에 항복하다가 시베리아에서 11년 동안 억류 생활을 보낸 다음, 1958년에 이토츠타사에 입사하여 군인시절의 경력을 살려 3년 만에 조사부문인 업무부장으로 발탁되어 주로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배상 비즈니스’를 주도한 인물이다.

45) 최영택에 대한 인터뷰, 共同通信社(編), 앞의 책.
 46) 츠지는 대본영 참모로서 태평양전쟁의 대부분 작전입안에 주도했으며, ‘작전의 신’이라고 불렸다. 전범으로 체포될 것을 피하기 위해 아시아 각지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시효가 성립한 후에 일본으로 귀국하여 반공운동에 참가 하는 동시에 국회의원을 지냈다.
 47) 이토츠타사 서울지점장을 지낸 코바야시(小林勇一)의 증언, 共同通信社(編), 앞의 책, 12쪽. 당시 인도네시아 ‘배상 비즈니스’에서는 배상협상에 관여한 키시와 연관이 있는 키노시타산상(木下産商)이 유리한 입장에 있었으므로 이토츠타사는 이와 별도의 교섭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48) 최영택에 대한 인터뷰, 共同通信社(編), 위의 책.

를 개척한 것은 최영택의 술회대로 ‘후에 있을 거래에 큰 의미를 갖게 된 것’을 내포하고 있었다.⁴⁹⁾

이와 같이 교두보를 확보한 이토츠타사는 이후 세지마의 부하인 박정희의 일본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타카하라(高原友生), 그리고 해군항공학교 출신인 서울지점장 코바야시(小林勇一) 등 군출신자들을 포진함으로써 한국의 ‘배상 비즈니스’를 선점해 나갔다.⁵⁰⁾ 이와 같은 이토츠타사—코다마—김종필로 연결되는 관계는 박정희까지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이토츠타사가 한국에서 전개한 ‘배상 비즈니스’ 수주과정은 한일 ‘만주인맥’의 교류로 형성된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2. 일본공영(日本工營)

일본공영의 사례는 코다마나 야츠기와 같은 일본측 ‘흑막’과 김종필을 비롯한 한국의 ‘실세’들을 거치지 않고 박정희와 키시를 직접 통함으로써 사업을 수주해 나갔다는 점에서 첫 번째 사례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공영은 1946년 6월에 건설엔지니어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인프라개발건설링 기업이다. 이들 엔지니어는 대부분 1930년대 중반부터 당시 만주국 실업부 차장(滿洲國實業部長)이었던 키시가 승인한 압록강개발사업 및 송화강개발사업에 참여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일본공영 초대 회장 쿠보타(久保田豊)⁵¹⁾는 일본을 대표하는 다목적댐 건설 엔지니어였다. 이들 사업에 앞서 당시 조선총독이었던 우가키(宇垣一成)에게 조선과 만주의 경계선을 따라 흐르는 압록강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생산되는 전력을 만주와 조선이 절반씩 나눔으로써 건설비 부담 또한 절반씩 부담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⁵²⁾ 또한 쿠보타는 이미 조선 각지에서 수풍

49) 위의 책.
 50) 다른 종합상사들 또한 군인 출신자들을 對韓 비즈니스의 전면에 세워 박정희의 신임을 얻으려고 했다. 예를 들어 미즈비시상사는 계열인 미즈비시은행의 후나바시(舟橋健男) 서울지점장을 앞세웠는데, 그는 박정희와 일본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57기생이었다. 朝鮮問題研究會(編), 『シリーズ日韓問題 ② 經濟の着』(東京: 晩聲社, 1978), 29頁.
 51) 쿠보타는 도쿄제대 공학부를 졸업한 후, 내무성 등을 거쳐 1926년에 조선수전(朝鮮水電)에 입사했다. 그는 기술자들을 이끌고 압록강 유역 평안북도에서 당시 세계5위 규모였던 다목적댐 수풍(水豊)댐을 건설을 주도했다. 諷刺勝, 「連載 “開發屋”—代記 久保田豊: 夢の殘影①」, 《財界日本》, 2001年 8月號, 87頁.

(水豊)댐을 비롯한 대규모 댐건설사업을 주도한 경력도 가지고 있었다.

댐건설사업은 만주의 중공업화를 위한 산업개발5개년계획(産業開發五個年計劃) 추진에 필요한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다. 이것은 쿠보타를 비롯한 엔지니어들의 참여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만주국과 관동군 관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⁵³⁾ 이러한 경위로 쿠보타를 비롯한 일본공영 관계자들이 키시를 위시한 만주국 관료 및 관동군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또한, 전후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국가에서 일본에 의한 ‘배상 비즈니스’가 추진되었을 때, 이들의 기술과 인맥을 접목시켜 인프라 건설관련 건설업 업무를 다수 수주했다. 전후 쿠보타가 다시 한국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배상 비즈니스’의 영향이 컸다. 이들은 일제치하 조선 각지에서 댐 건설 설계를 맡은 경력이 있었으므로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도 작업하기가 쉬운 곳이기도 했다.

한편, 일본공영은 박정희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는데, 이를 위해 박정희의 일본 육군사관학교 10년 선배인 유카와(湯川康平) 사장을 앞세웠다. 유카와는 박정희가 5·16쿠데타를 성공시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61년 10월에 한국에 입국해 직접 박정희를 찾아갔다. 그가 박정희와의 면담을 신청할 당시, 신청서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키요하라’라는 옛 이름을 기입했는데, 그것은 박정희를 포함한 일본군 청년장교들의 선망의 대상였던 키요하라(清原康平) 소위와 동일 인물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⁵⁴⁾ 이로써 유카와는 박정희와의 직접 면담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⁵⁵⁾

한편, 일본 기업들은 1962년에 이케다 수상이 소집한 23개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조사단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것은 곧 한국진출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카와가 미츠이, 미츠비시, 이토츠히와 같은 일본 대기업 사장을 제치고 단장 자리를 거머쥐었는데, 그가 단장이 될

52) 위의 기사.

53) 압록강 사업에서는 수력발전량 124만 킬로와트로 규모로 계획되었다. 위의 기사.

54) 朝鮮問題研究會(編), 『シリーズ日韓問題③ 軍事一體化』(東京: 晩聲社, 1978), 205頁.

55) 키요하라 소위는 2·26사건에서 반란군 경찰청 습격대장을 맡은 주모자 중 한명이었다. 이로 인해 사건진후에 면관된 후 군사법정에서 무기징역형 판결을 받았으나 조기 석방되었다. 그 후 만주 등지에서 일본군의 대소련 첩보활동에 종사하여 반일활동을 하는 조선인들을 소탕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위의 책, 74~75頁.

수 있었던 까닭은 그의 군경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⁵⁶⁾ 이리하여 일본공영은 1965년 남강댐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시작으로 안동댐, 소양강댐, 대청댐, 충주댐과 같은 다목적댐 건설 프로젝트나 금강 및 낙동강 종합개발조사 등 다수의 인프라 건설 관련사업에 대한 참여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⁵⁷⁾

이상과 같이 일본공영은 키시와 만주시절에 맺은 인연을 계기로 전후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전개된 ‘배상 비즈니스’ 관련 사업을 수주해나갔으며, 일본이 선진국대열에 합류함으로써 본격화된 ODA 및 엔차관과 같은 국제협력 사업에서 일본 최대 규모의 기술건설기업으로 성장해나갔다. 그러므로 일본공영의 사례는 일본의 키시와 쿠보타의 ‘만주인맥’과 유카와의 군경력을 이용하여 박정희와의 직접적인 교섭통로를 개척한 성과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한일 ‘만주인맥’의 결합을 뚜렷이 드러난 일례라고 할 수 있다.

IV. ‘배상 비즈니스’가 박정희 정부 내부에 미친 영향

II장에서 보았듯이 한국의 ‘만주인맥’은 박정희 개인에게 권력이 일원화되었다. 일본 기업들의 한국에서 전개된 ‘배상 비즈니스’에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박정희의 권위를 받아들여준 그의 친위세력들 중 누가 ‘현시점에서’ 가장 신임을 얻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인물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다. 이는 쿠데타로 권력을 쟁취한 독재정권이라는 권력구조 자체가 내포하는 고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로 인해 비공식 교섭의 여지가 발생함으로써 부패구조가 팽배하게 되었다.

박정희 정부의 ‘배상 비즈니스’ 창구 역할을 맡았던 인사로서는 김종필(金鍾泌) 외에도 김형욱(金炯旭), 김성곤(金成坤), 이후락(李厚洛) 등이 있었으며, 이들 중 적어도 한 명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업을 수주할 수 없었다.⁵⁸⁾ 누가 가장 유력한가

56) 유카와는 일본 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에 관해 “박정권이라는 군사정권이 탄생했으니 일한경제협력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박과 나는 동지니까 곧 협력체제가 마련될 것”이며, “나도 군인, 박도 군인”이라고 자신과 박정희 사이의 관계를 강조한 발언을 한 바 있다. 《エコノミスト》, 1962年 3月 6日號

57) 日本工營株式會社, 『日本工營50年史』(東京: 日本工營株式會社, 1996), 56-57頁.

58) 小林進, 『日韓ゆづの真相: 元韓國情報部長金炯旭は語る』(東京: 政治經濟研究會, 1977), 10-11頁.

에 관해서는 시기에 따라, 초기에는 김종필이, 김종필이 외유로 떠난 시기를 전후하여 김형욱과 이후락이 차지했다. 그리고 이들이 실각함으로써 김종필이 다시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이들의 막강한 권력의 배경은 오로지 박정희의 신임에 달려 있었다. 박정희의 신임을 잃으면 영향력마저 잃게 되는 것은 당연했다.

이들이 ‘배상 비즈니스’에 관여한 까닭은 정치자금 확보를 위해서였으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역무배상 방식이라는 ‘배상 비즈니스’의 특성이 뒷받침해주었기 때문이다. 즉, 일본 기업에 의한 독점적 수의계약으로 인해 사업규모와 이익률을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 책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국의 ‘실세’들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생산물 및 용역의 구매계약 인증부터 수송, 보험, 검사에 이르기까지 일본 측이 독점적으로 행했지만 수주 기업의 선정권은 전적으로 한국측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이들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⁵⁹⁾

V. 결론

지금까지 검토해온 바와 같이 한일 국교수립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의와 내역이 불분명한 청구권자금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압력으로 일본의 대아시아 배상문제는 ‘역무배상’과 ‘배상 비즈니스’라는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각국의 이권을 둘러싸고 수시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일국교정상화 과정은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 양국

59) 1978년 11월에 발표된 미 하원 프레이저위원회는 박정희 정부의 자금동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일조약 체결로 인해 한국에서 처음으로 정치자금 조달 시스템이 완성되었고, 일본의 상업차관 유입이 한국정계 내부의 권력균형을 좌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형욱의 증언에 의하면 서울지하철 사업 수주를 둘러싸고 ‘박정부’가 200만 달러, 이후락 개인이 50만 달러, 그리고 키시가 400만 달러를 쟁겼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형욱은 심지어 사업수주를 위해 자문을 구하러 온 미츠비시상사 서울지점장에게 ‘박대통령은 키시의 말이면 뭐든지 들어줄 것’이라고 가르친 적이 있다고까지 증언했다. 이와 같이 증언을 통해서도 박정희와 키시가 한일 양국을 잇는 ‘만주인맥’의 정상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책, 43쪽.

의 ‘만주인맥’을 활용하게 되었다. ‘만주인맥’은 주로 비공식 통로의 개척을 위해 중요한 교두보로 활용되었고, 비공식 통로의 개척은 곧 ‘실세’와의 연결을 의미했다. 그런데 바로 그 ‘실세’의 중심에 박정희와 키시라는 한일 ‘만주인맥’의 정점이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배상 비즈니스’ 자체의 특성이 박정희 정부에 미친 영향이다. 이토츠타사와 일본공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기업은 직간접적으로 ‘만주인맥’을 교섭의 통로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주대상업체를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었던 점과 수의입찰 방식이라는 ‘배상 비즈니스’의 특성이 박정희에게 신임을 얻은 ‘실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구도는 이들이 정치자금이라는 개인적 이익도 챙길 수 있게 만들었다.

결국 일본의 ‘배상 비즈니스’ 전개과정을 통해 일본은 최초의 청구권자금 지출로 일본 기업의 아시아 시장 재진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은 여타의 아시아 국가는 물론 마지막으로 배상 비즈니스를 전개했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한국은 여타의 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기술과 노하우, 자금력을 이용해 전후 산업화와 인프라 건설을 꾀하고자 했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이익을 절충하고자 동원되었던 ‘만주인맥’의 결합과정을 보면 우선 교착상태의 외교협상의 교섭통로를 개척을 위해 정치적 ‘실세’와의 비공식적 접촉을 시도하는데 이용되었고, 교섭통로가 확보된 후에는 일본 기업 내의 만주경험자들이 투입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한국에서의 ‘배상 비즈니스’ 전개과정에서 ‘만주인맥’의 결합과 그 역할을 정리해보자면 크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은 난항을 겪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만주’라는 공통분모를 활용하여 국교정상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또한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 양국은 각기 자국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반면 양국의 ‘실세’였던 ‘만주인맥’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한 자금운영이 집행됨으로써 ‘부패’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초래했다.

참고문헌

《세계일보》; 《월간조선》.

權逸, 『玄海灘을 사이에 두고: 日本 속의 南과 北』. 서울: 해외교포문제연구소출판부, 1983.

김경일(외),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서울: 역사비평사, 2004.

김동조, 『회상 30년 한일회담』. 서울: 중앙일보, 1986.

김민철, 「만주국의 관료를 꿈꾸는 조선인 대동학원 출신자들」. 『민족문제연구』 제12호, 1996, 40~45쪽.

박정희시대 특별취재팀, 『실록 박정희』. 서울: 중앙M&B, 1998.

박진희, 「韓日국교수립과정에서 '韓-日인맥'의 형성과 역할」. 역사문제연구소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년 10월 5일.

신주백, 「滿洲國軍 속의 조선인 군인들」. 역사문제연구소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년 10월 5일.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와 한일회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정우현, 『실록 군인 박정희』. 서울: 개마고원, 2004.

Baldwin, Frank(ed.), *Without Parallel: The American-Korean Relationship since 1945*. New York: Random House, 1973.

Johnson, Chalmers,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Lee, Chong-Sik, *Japan and Korea: The Political Dimension*. California: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5.

《朝日新聞》; 《エコノミスト》; 《財界日本》.

姜鶯郷, 『駐日代表部』. 東京: 東亞PR研究所出版部, 1966.

淺田喬二・小林英夫(編), 『日本帝國主義の滿洲支配』. 東京: 時潮社, 1986.

五十嵐仁, 『戦後政治の実情』. 東京: 小学館, 2003.

李鍾元, 『東アジア冷戦と韓米日關係』.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96.

太田修, 『日韓交渉』. 東京: クレイン, 2003.

共同通信社(編), 『沈黙のファイル』. 東京: 共同通信社, 1996.

小林進, 『日韓ゆ着の真相: 元韓國情報部長金炯旭は語る』. 東京: 政治經濟研究會, 1977年 10月.

小林英夫, 『滿洲と自民党』. 東京: 新潮社, 2005.

椎名悦三郎追悼録刊行會(編), 『記録 椎名悦三郎 下巻』. 東京: 椎名悦三郎追悼録刊行會, 1982.

高崎宗司, 『検証 日韓会谈』. 東京: 岩波新書, 1996.

竹森久朝, 『見えざる政府: 兒玉譽士男とその黒の人脈』. 東京: 白石書店, 1976.

朝鮮問題研究會(編), 『シリーズ日韓問題② 經濟ゆ着』. 東京: 晩聲社, 1978.

朝鮮問題研究會(編), 『シリーズ日韓問題③ 軍事一體化』. 東京: 晩聲社, 1978.

日本工營株式會社, 『日本工營50年史』. 東京: 日本工營株式會社, 1996.

毎日新聞社政治部(編), 『黒幕 兒玉譽士男』. 東京: エール出版社, 1976.

矢次一夫, 『わか浪人外交を語る』. 東京: 東洋經濟新報, 1973.

山本剛士, 「日韓關係と矢次一夫」. 日本國際政治學會(編), 『國際政治』 第75號, 1983年 10月, 114~129頁.

山本有造, 『滿洲國 經濟史研究』. 東京: 名古屋大學出版會, 2003.

第38回參議院法務委員會, 第16號, 1961年 5月 23日.

국문 요약

본고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청구권관련 사업('배상 비즈니스')를 둘러싼 한일 '만주인맥'의 형성 및 결합과 그 역할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1960~70년대 한국과 일본의 권력의 중심에는 박정희(朴正熙)와 키시(岸信介)를 정점으로 하는 만주경험자들이 있었다. 만주에서 각기 군인, 기업가, 기술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경험을 쌓았던 만주경험자들은 전후 한일 양국에서 이른바 '만주인맥'을 구성하여 각기 '권력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들은 한일 '배상 비즈니스'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역무배상 방식으로 이루어진 '배상 비즈니스'는 일본 기업에 대한 독점적 입찰권과 일본정부에 의한 직접결제가 보장된다는 매우 유리한 조건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배상 비즈니스'를 막대한 이익창출기회인 동시에 아시아시장에 대한 재진출의 교두보로 이용하고자 했다. 이에 일본의 기업들은 한국의 배상 비즈니스를 선점하기 위해 수주결정권자였던 박정희와의 직간접적인 교섭통로를 개척하기 위해 '만주인맥'을 활용했으며, 박정희 정부의 '실세'들을 상

대로 앞 다퉈서 로비활동을 전개했다. 이토추상사(伊藤忠商事)와 일본공영(日本工營)이라는 두 민간기업의 사례를 통해 보듯이 한일 ‘만주인맥’의 결합 과정은 우선 양국의 교섭통로를 개척하기 위해 만주군 출신의 정치적 ‘실세’와의 비공식적 접촉을 시도했으며, 이어 교섭통로가 확보된 후에는 일본 기업 내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진 만주경험자들이 투입되는 형태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박정희 정부는 여타의 아시아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기술과 노하우, 자금력을 도입하여 산업화와 인프라 건설을 꾀하고자 했으므로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적 이익의 이면에는 박정희 정부 ‘실세’들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기 때문에 청구권자금에 대한 부패가 초래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 고찰한 바, ‘만주인맥’은 난항을 겪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만주’라는 공통분모를 활용하여 국교정상화를 이끌어내었으며, 한국국교정상화를 통해 한일 양국이 각기 자국의 목적을 달성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으나, 한일 ‘만주인맥’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불투명한 자금운영에 따른 ‘부패’가 수반되는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투고일 : 2008. 7. 14.

● 심사완료일 : 2008. 8. 28.

● 주제어(keyword) : 만주인맥(Manchuquo Networks), 배상 비즈니스(Reparation Business), 박정희(Park, Chung-hee), 岸信介(Kishi, Nobusuke), 伊藤忠商事(Itochu Corporation), 日本工營(Nippon Koei).